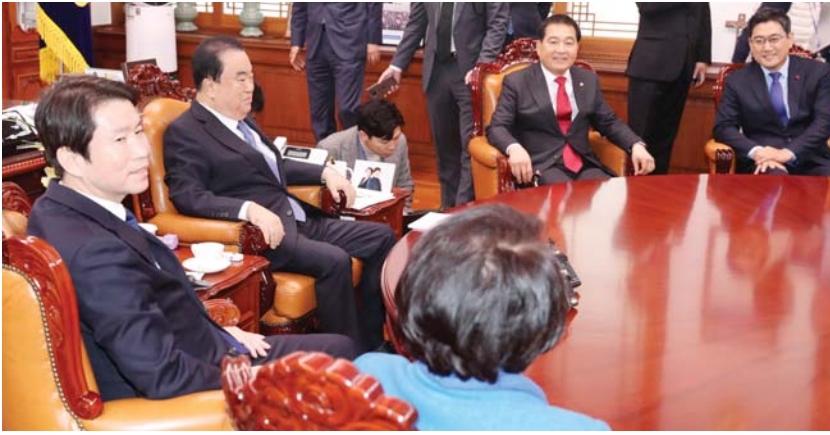


여야3당, 오늘 예산안 처리 '합의'

한국당, 의원총회서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 패트법안·공수처 설치 등은 상정 보류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며,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의 안전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10일 본회의에서는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등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논의하는 것

에 대해 "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되신 뒤 첫 번째 협상인데, 그런 일(필리버스터 철회 반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앞서 회동 중에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거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안전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도 정기국회 중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협상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짝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예산안(심사)을 위한 예견위를 가동해 정상화하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과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 후 촬영을 하고 있다.

'5선 비박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선...黃心 견제 효과 작용?

심재철, 친박-초재선 그룹 꺾어...김재원 '완충지대' 역할 기대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결과 5선의 비박계 심재철 의원이 당선된 것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결과 심재철-김재원(정책위의장) 조는 결선 투표에서 52표를 얻어 각각 27표를 얻은 강석호-이장우, 김선동-김종석 조를 꺾었다. 유기준-박성중 조는 1차 투표에서 10표를 얻었다.

심 의원은 당선은 최근 원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대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재신임의 건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무산시키는 등 원내 장악에 나섰다.

당 내부에서는 나 전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떠나 원내 시한에 원의 인사인 황 대표가 간섭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계파 성향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는 심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가 황 대표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심리에서다.

타 후보들이 그동안 황 대표와의 '협력'을 강조한 반면 심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발표에서 "저는 계파가 없다. 제가 당선된다면 계파 논쟁은 발을 못 붙일 것"이라며 "황심(黃心)을 거론하며 표를 구걸하는 것은 당을 망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당내에서 단호한 성격으로 책임감도 상당하고, 완벽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심 원내대표가 야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과 예산안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등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두루 경험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심 원내대표의 연륜이 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재선의 김선동 의원에 대한 초·재선 그룹의 표몰이도 예상됐지만 짝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연륜이 의원들의 표심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김재원 의원 역시 심 원내대표의 당선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결심하면 밀어붙이는 심 의원의 의결과 연륜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원내대표 득표 결과 심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는 39표, 결선 투표에서는 52표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10표를 얻은 친박계 유기준 의원의 표와 비박계, 초·재선 그룹인 강석호·김선동(각각 28표) 의원에 대한 표가 각각 심 원내대표에게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호 기자

홍준표 "추미에 앞세워"

검찰 무력화 작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추미에 법무장관 내정자를 앞세워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작태는 마치 87년 5월 직선제 개헌 민의에 역행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선언'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경찰이 나서 검찰의 청와대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총력으로 검찰을 견박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제 그만 뭉부림치고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니들도 똑같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세상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본사사령

▲ 위지훈 命

편집국 지역사회부

(창흥 담당)부장

<2019년 12월 10일자>

김무성 "총리에 김진표 적임자...자유시장경제 중시 인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이날연 국무총리의 후임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전문가 총리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의

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라며 "정치와 경제를 두루 경험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저는 이 시점에 거론되는 여러 인사들을 보건대 김진표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대

"경제 문화한 총리 임명하면 文정부 몰락 재촉할 것"

"김진표, 경제전문가...여권 인사 중 가장 적임자"

신들로부터 5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을 만큼 추락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받아든 것은 소득주도성장 등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엉터리 경제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4

통령은 현재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주저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 민주노총,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참여연대, 좌파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



김무성

김진표

장을 이끌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된다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과, 우리 경제를 망쳤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약 경제에 문외한인 총리를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면을 무시한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한층 재촉하는 최악의 망사(亡事)이자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